

제273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이금선 의원



“급식사각지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합니다.”

“시 관리도로의 유지관리 문제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SK온, 머크(주) 투자 협약 이후 투자  
진척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시정질문과 답변 내용  
(일괄질문·일괄답변)입니다.





## 이금선 의원

|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

### ➔ 이금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이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급식 사각지대에 있는 초등방과후돌봄시설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급식비 지원, 시 관리도로의 유지·관리, SK온과 머크사와의 투자협약 이후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급식 사각지대에 있는 초등방과후돌봄시설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급식비 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아동인구의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며 저출산 대응 및 아동 복지 관점에서 아동돌봄지원은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대전광역시와 교육청에서는 초등학생 아동의 돌봄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형태의 초등 방과후돌봄 제공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은 각각 소관 부서 및 이용대상자, 연령기준 등이 다르지만 온종일돌봄을 목표로 학교 및 지역사회 등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방과후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돌봄에 있어 양질의 급·간식 지원은 성장기 아동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급·간식 지원이 돌봄시설별로 차이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역아동센터 및 초등돌봄교실은 일 8,000원 수준의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한편 다함께돌봄센터의 급·간식비는 본인부담입니다.

급식비를 내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550명의 아동은 대전지역에서 방과후 돌봄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중 급식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님, 방과후돌봄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민선 8기 약속사업을 보면 다함께돌봄센터의 확충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설 개수의 확장뿐만 아니라 급·간식비 무상지원까지 함께 추진한다면 급·간식비 부담의 해소로 돌봄시설의 이용률뿐만 아니라 만족도 향상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급식 지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자의든 타의든 불가피한 이유로 공교육의 울타리 밖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공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교육이나 훈련의 기회를 포기한 것은 아니며,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우리 사회의 일원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받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무상급식 지원대상으로서 급식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의 급식비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급식비 지원조건의 확대방안입니다.

여성가족부 지침상으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거나 센터에서 주최하는 캠프 등에 참여했을 경우에 한해서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만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학교 밖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급식비 지원방안입니다.

첫 번째로 제안한 지원범위가 행정적·재정적 여건상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급식비 지원 확대방안에 대한 검토를 제안 드립니다.

현재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에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조례가 모두 존재 합니다.

특히 양 조례 모두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해당 조례를 근거로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 관리도로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271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시 관리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청소관리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환경관리요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도로법」 제31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관리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인 대전시청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은 시장께 있다고까지 하였지만 근로환경 개선은 여전히 미진한 상태였습니다.

얼마 전 행정부시장께서도 시·구정책조정간담회에서 이 사안에 대하여 “쓰레기 청소 차원이 아니라 도로관리 차원에서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으니 검토하라.”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말 대전자치구의장협의회에서는 자치구의장과 자치구환경노조위원장이 함께 대전시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 관리도로 청소업무를 대전시에서 직접 수행하라고 성명서를 발표 하였습니다.

「도로법」 제2조에서 도로의 유지·관리를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도로관리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는 해당 시설물의 청결을 유지하는 활동으로 이는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소가 도로의 유지·관리에 포함되는 것은 누구나 인지할 수 있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지금까지도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국토부에 질의한 답변을 확인하고도 이를 부정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토부에서도 도로의 유지·관리에 도로청소를 포함하여야 하며, 「도로법」 제31조에 따라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에서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시가 환경관리요원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무모하고 무책임한 행정을 당장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구에 청소업무 지원을 계속 요청한다면 최소한 안전장비 지급 및 환경정비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차량 등에 대한 예산과 지원 대책 등 행정기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은 마련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장께서도 자치구의 소관 업무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음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시설공단에서 자동차전용도로 12개 노선과 지하차도, 터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부산시설공단에서 도시고속도로와 터널 및 지하차도, 광안대교에 대해 위탁관리를 실시하는 등 전국 시설공단에서 운영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설관리공단은 사회인야구장, 대전월드컵경기장 민간위탁과 타슈의 대전 교통공사 이관 등으로 사업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하수처리장 이전으로 계속 축소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전시설관리공단에서 서울, 부산과 같이 시 관리도로와 터널 등에 대한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여 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탁관리를 통하여 예산의 절감과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SK온, 머크 라이프사이언스와의 투자협약 이후 시의 추진계획 및 방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는 지난 4월 전기차 배터리 생산기업인 SK온과 투자 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5월에는 독일의 머크사, 산업통상자원부와 투자 협력 양해각서 체결 소식을 알리며 협약 체결에 따른 지역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투자 효과를 대대적으로 홍보 하였습니다.

시에 따르면 SK온은 우수한 연구개발 능력을 토대로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협약을 통해 2025년까지 총 4,700억 원을 투입해 대전 유성구 원촌동 일원에 연구원 시설을 확장하고 차세대 배터리 파일럿 플랜트 및 글로벌 품질관리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며 400개가 넘는 일자리가 신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독일 머크사는 글로벌 과학기술 선도기업으로 새로운 아시아태평양 바이오 공정시설의 국내 최적 입지로 대전시 둔곡 외국인 투자 지구에 생산시설의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두 기업의 투자 소식에 대전시민과 지역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과학도시를 표방해온 대전은 300여 개의 바이오 기업이 모여 있고 카이스트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등 과학기술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글로벌 앵커기업의 부재에 따른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그러한 아쉬움이 일부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협약 체결 이후 시에서는 구체적인 협약내용이나 진행상황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자칫 투자가 무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먼저, 협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SK온 협약의 경우 연구소 확장 투자 및 지원에 관한  
협력사항과 그 이행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의 노력사항으로 기업의 연구소 확장 투자 및 지원을 통한 신규 고용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K온은 투자에 따른 지역주민 우선채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과 협약서에 언급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머크사와의 투자 협력 양해각서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생산기지 개발을 위한 국내 입지로 대전시를 고려하고 생산공장에 필요한 인력 채용 시  
대전시민에게 우선적인 채용 기회를 부여합니다.

협약 당사자들은 본 건에 따른 사업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실행하고 사업 수행 시  
사업 부지 입주에 필요한 협력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협약서 모두 당사자들의 잠정적 협업 의사를 명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이고 정확한  
조건은 향후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투자 기간과 내용 등 세부사항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 협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두 기업의 투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업들이 제시한 투자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어떤 일정과 내용으로 투자가 계획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우려는 협약서가 지니는 법적 성격입니다.

협약서는 법률적 효력,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신사협정입니다.

SK온과의 협약서 제5조에 비밀유지에 관한 조항을 제외하고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머크사와의 협약서에도 본 각서가 당사자들의 잠정적 협업 의사를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 고용창출과 지역주민 우선채용 사항도 강제성이 없습니다.

SK온은 연구소 확장 투자협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머크사는 대전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공장 설립을 결정하여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협약 체결도 중요하지만 협약 체결이 기업의 실제적인 투자로 연결되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SK온으로부터 1조 5,000억 원 증설 투자를 유치한 충남은 도지사가 직접 지원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5,453억 원 상당의 투자협약을 유치한 창원시에서는 투자협약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협약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 이행에서의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약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투자 진척을 위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과 점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대전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금액은 3억 700만 달러로 2022년 2,700만 달러 대비 11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머크사와의 투자협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글로벌 기업의 투자 소식은 관련 기업과 연구소 등의 투자를 끌어들이 지역 경제에 부차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본질인 기업의 투자가 무산된다면 곧 사라질 모래성일 뿐입니다.

이장우 시장께서는 모래성이 아닌 철옹성 같은 기업 유치와 투자 전략에 대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존경하는 이금선 의원님께서서는 초등돌봄시설 및 학교 밖 청소년 급·간식 지원, 시 관리도로 유지, SK온 및 머크 투자협약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평소 따뜻한 마음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크게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돌봄시설 중 다함께돌봄센터 급·간식비 지원에 대한 시의 계획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이용자들이 급식비를 포함한 이용료를 지불하는 형태로 설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나 학교에서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돌봄교실과는 이용대상과 목적이 약간 다르기도 합니다.

다만 다함께돌봄센터 역시 지역 내 초등돌봄 해소라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일정 수준의 공적 보조는 저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우리 시는 초등돌봄시설 간 지원 격차를 해소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에 대한 급식비 중 방학 중 급식비를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8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시비 4억 원, 구비 4억 원 정도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가는 9천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26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18세 미만의 초·중·고 학생, 취약아동을 우선으로 해서 이용료를 무료로 하고 급·간식비를 받지 않습니다.

14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만 6세에서 12세 미만의 초등학생,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월 5만 원 이용료를 받고 이용자부담으로 하는 센터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돌봄교실은 교육부가 주관 부처이고 학교, 교육청에 의해서 만 6세에서 12세 미만의 초등학생,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무료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다함께돌봄센터 급식비 예산을 지원해야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1식에, 아까 의원님께서서는 8천 원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9천 원 정도로 해서 연간 80일, 80식 정도 지원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은 8억 원 정도 됩니다만 앞으로 시비, 구비로 나눠서 5 대 5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함께돌봄센터 급식비 타 시·도는 어떻게 운영하나 봤더니 서울시의 경우만 방학 중 중식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데, 일부 경기도 같은 데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범운영하는 데도 있고 해서 다른 시·도와 관계없이 아이들에 대한 정책은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돌봄교실이나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식비 지원을 학교 밖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 전체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어보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곳에 등록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현재 대전시와 서구, 유성구 세 곳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등록을 보면 1,137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요.

저도 급식비 지원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밖 청소년 이용시설,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용하는지 여부 또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수 등이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급식비나 보조금 지원 및 관리도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이용 실태를, 보다 정밀한 실태조사를 먼저 실시한 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급식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급식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주로 아이들 먹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나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서 국가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사회가 관심을 갖고, 정부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당연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를 통해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교육청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교 밖 청소년의 급식 실태 파악 및 지원대상 중복 가능성 등에 대해서 대전시와 교육청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함께 검토, 논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법」에 따른 대전시 관리도로의 청소업무에 대한 예산 및 지원대책 관련해 물어보셨는데 가장 큰 문제는 청소근로자에 대한 안전, 사실상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느냐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하든, 자치구가 하든, 공단이 하든 저는 누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단지 청소근로자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대책만 제대로 수립된다면 누가 하든 별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되느냐 이렇게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단지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함께 충분히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도로법」에 의해서 자치구가 해야 되느냐, 시가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근로자들의 안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직진단을 같이 해보고 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어떤 것이 좋고 또 이런 안전 확보에 있어서 인력이나 장비, 운영 현황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우리 대전시가 일부 할 것이냐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인력이나 장비를 지원할 것이냐 또 아니면 서울이나 대구처럼 일부 공단에서 맡을 것이냐 아니면 인천이나 광주처럼 건설본부에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서로 긴밀히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네가 해야 되고, 어느 기관이 해야 되고 서로 이렇게 자꾸 떠밀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책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서로 긴밀하게 토의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온과 머크사 투자협약 이후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투자 완료 시점까지의 추진일정 내용을 물어보셨고 철옹성처럼 제대로 방어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만리장성처럼 잘 방어하고 있습니다.

우선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투자협약 이후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SK온은 올해 4월 24일 투자협약 체결을 했고요.

원촌동 SK대덕연구원 부지에 4,700억 원을 투입하여 정상적으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일자리가 900개 정도 창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다국적 기업 머크사는 금년 5월 3일 투자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6월에 특별지원을 위한 대전시의회 사전동의를 완료했고요, 9월 중 머크사와 입주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 및 내용은 SK온의 경우 연면적 7만 3,400㎡ 규모의 연구 인프라 확장 사업을 3개 구역으로 구분해서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완공할 계획입니다.

1구역은 제2연구동 등 4개의 건물이고 제2구역은 차세대 배터리센터 통합 사무동 건물을 짓게 되고 3구역은 신뢰성 평가동 등 4개 건물을 하게 됩니다.

머크사는 내년 상반기 중 투자 결정이 확정되면 공사를 착공해서 2025년 준공하고 2026년부터는 백신 바이오 약품 제조 원료 등을 본격 생산할 계획입니다.

며칠 전에 머크 한국대표를 시장실에서 만났는데 여러 가지, 이뿐만 아니고 원촌동에 바이오 혁신지구 건설에 대한 설명도 했고 그 지역에 머크가 추가 투자를 한다면 우리가 대비를 하겠다 이런 의견도 나눴고요, 거기에는 또 외국인 투자 지역도 일부 넣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머크 관계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좀 전에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바이오 기업, 대전에 지금 상장한 기업 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 포함해서 300여 개의 기업이 뛰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상장하고 또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머크가 세계적인 유통망과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앵커기업으로, 우리가 구두로 상당히 요청을 했고 머크에서도 앵커기업 역할을 해보겠다 하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머크의 투자와 결정에 따라서 대전이 상당히, 바이오 헬스케어의 핵심지역으로 약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에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고요.

여러 가지 우리하고 기업문화가 좀 달라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사회의 최종 결정이 있는 후에 공개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여러 가지 논의된 것들을 비공개로 해달라는 머크사의 요청에 따라서 아직 자세하게 브리핑을 못 했고요.

참고로 지금 현재 머크는 기본설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내년 상반기쯤 착공해서 본격적으로 가동할 수 있겠다는 머크사 관계자의 전언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서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기본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약서의 한계 극복을 위해서 대전시의 행·재정적 지원 사항 및 점검사항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SK온의 경우는 그동안 시-SK온과 실무협의 등을 통해서 동절기 공사 중지 해제, 도로 굴착 허가 승인, 공사인력 주차장 확보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이미 한 바 있고요.

또한 2025년 준공 시까지 건설공사 공정 컨설팅을 통해 원활한 사업 준공과 안전 사고 예방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시와 유성구가 협의해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준공 및 사용 승인 시 유성구 또 소방서 등 관계기관의 협조와 인허가 절차가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머크사의 경우 내년 6월에 과기부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구 관리·육성 계획 고시를 개정하여 입지 제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전시의회에서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동의안을 통해 외국인 투자 금액 내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7월에 대전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 지구 개발사업 실시 계획을 변경하여 창고 등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재정적 지원으로는 임대료, 지방세 등 감면과 산자부 국비 지원사항에 맞춰 우리 시도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머크 본사의 투자 규모 결정 최종 시까지 비공개 요청이 있어 세부 지원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고용과 관련해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머크와 관련해서는 머크가 사전에 인력 수요에 대한 공급요청을 저희한테 해주기로 했고요, 저희한테 해주면 생산인력 그리고 관리인력, 연구개발인력 이렇게 3개 정도의 파트로 구분해서 마이스터고등학교 그리고 폴리텍대와 그에 적합한 인력공급 양성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또 지역대학과 관련해서 바이오 특히 생명공학 그리고 생물학 이런 여러 가지 과 육성을 본격적으로 해서 바이오 기업들 육성하는 데 인재공급이 대전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대비를 할 생각입니다.

이미 대학교 총장님들과 많이 상의가 됐고 대학도 대전시의 전략사업과 발맞춰서 학과 개편 포함한 여러 가지 대학의 학과를 일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설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발대 그리고 충남대, 카이스트가 이런 인력 양성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한발대의 경우는 한발대에서 부지를 제공해서 저희가 클린룸 제공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우수한 반도체 기업을 국가산단에 안착시킬 수 있도록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충청남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정부의 수장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투자 유치 문제를 세밀하게 관리하고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시도 투자 유치한 2개 기업을 포함해서 수시로 이에 대한 점검과 또 필요한 사항들을 잘 챙겨 나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 현재 우리가 조성 중인 산단, 국가산단 포함한 평촌산단에 좋은 기업들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뛰고 있습니다.

아마 곧 시민들께 좋은 투자 발표가 후속적으로 따를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네 가지 큰 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좀 더 정책적인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이금선 의원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질문과 제언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됨에 따라 제도권 밖의 교육 시설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대전교육청에서는 대안교육기관으로 7개 기관이 등록하였으며 학생들은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학습권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등록 이후에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었고 교육부 기준에 맞게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식비 지원의 경우에는 현재 1개 구청에서 지역 내 등록한 대안교육기관 1곳을 선정하여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대안교육기관 급식비는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으며 타 시·도 실정은 비슷합니다.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이 매우 중대한 사안임을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상호 협의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질문과 제언을 해주신 이금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